



6월 5일(월) 18:20 (회의종료) 이후 사용

비고

* 모두말씀 별도배포

담당

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

과장 송태복, 사무관 서수철
(044-200-2231, 2232)

이낙연 국무총리, '범정부적 AI 총력대응 추진'

- AI 고병원성 확진 직후, 관계장관·지자체 합동 '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' 개최 -
- 전국단위 초동대응과 차단방역을 강력히 추진키로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5일(월) 오후,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.

* 참석 : 국방부·행자부·농식품부·보건복지부·환경부·국민안전처 장관, 국무조정실장, 경찰청장, 17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

○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3일(토) 제주도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직후 AI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되었다.

□ AI는 지난 4월 4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두 달 만에 제주도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, 역학조사 결과 군산의 가금농장에서 판매한 오골계가 이번 AI 전파의 진원지로 파악됐다.

○ 군산의 가금농장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기 파주, 경남 양산, 부산 기장 등에도 오골계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정부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6월 6일 0시부터 위기경보단계를 '경계'에서 '심각'으로 조정하였다.

- 이 총리는 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AI 발생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, 제주, 경남 양산 등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였으며, 관계부처와 범정부적 AI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.
- 이에 따라 정부는 AI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초동 대응과 차단방역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.
- 한편, 이 총리는 지난 6월 3일 제주지역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직후 관계부처에 철저한 초동방역과 신속한 역학조사 등으로 AI 확산방지에 주력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.

<국무총리 AI 관련 긴급지시(6.3)>

- 제주도 AI발생 관련, 농식품부장관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아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, 초동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
- 특히 이번 AI 발생경로 역학조사 등을 신속히 이행, 초기 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
- 발생경로 조사 및 초기방역대책 등을 위해 오늘 농식품부장관 주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즉각 총리주재 관계장관·관련기관회의를 소집할 것
-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동향을 추가 보고할 것